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포맷스에 설치된 스크린에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석유전쟁 ‘앗 뜨거’ 정유·화학사 ‘비상’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간 ‘ 기름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10여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락하자 국내 산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특히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까지 하락하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제 유가는 24% 이상 급감하며 배럴당 30달러대를 겨우 유지했다. 하루 낙폭 기준으로는 걸프전 당시인 1991년 이후 최대다. 문제는 이번 국제 유가 하락이 2015년 촉발된 산유국과 미국의 치킨 게임으로 배럴당 100달러 하던 국제 유가가 30달러로 떨어져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당시 수요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공급 과잉이 불거졌던 것과 달리 현재 상태는 코로나19 사태

정유·화학 정제마진 추가 하락 우려
글로벌 경기침체...완성차 흥행 찬물
해운업계 부정적 영향 우려 예의주시

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유·화학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정유업계는 수요위축으로 지난해 말 정제마진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유 판매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당장 유가 하락에 따른 정유사의 재고평가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는 통상 원유를 사들인 후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2~3개월 후 판매하는데 유가가 단기간 급락하면 비싸게 구매한 원유 비축분의 가치가 떨어져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유가가 하락하면 정유사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특별한 상황이다”며 “수요가 감소하면 정제마진도 동반 하락하기 때문에 정유사에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화학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유가 하락은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원유 레진효과(원유 구매시기와 석유제품 판매시기 사이의 유가 변동에 따른 마진 등락효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

게 된다. 다만 이같은 실적 악화는 유가 하락이 장기화 될 경우에 화학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된다는 전망이다.

화학 업계 관계자는 “유가 하락으로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 쉽게 단정지을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제품 수요에 영향을 받는 곳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길 희망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국제 유가 하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제 유가 하락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유가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의 흥행에도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 붕괴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경기 악화가 겹치면 산업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

매출원가에서 유류비 비중이 높은 해운·항공업계는 유가 흐름보다 코로나19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지난해 반일감정에 수요가 급감한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사태로 여행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유가 인하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항공사 대부분 국제선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80%를 비운항하고 있으며 항공기도 거의 100대 이상을 주기고 있는 상태다.

국내 해운업계도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한 상태다. 현대상선의 경우 올해 2월 중국 발 물동량이 전년 동기대비 50% 가량 감소한 상황이다. 춘절 이후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공장이 정상가동 되지 않아 물동량이 크게 감소했다.

유가 하락은 유류비 부담을 감소시키지만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운 업계 관계자는 “매출원가에 유류비 비중이 회사별로 15%에서 30%가량 차지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다만 유가 하락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양성문·김수지 기자 ysw@metro.co.kr



與 ‘꼼수’ 논란에도 위성정당 ‘한 발 더’

정의당 불참, 민생당 내홍 등 내전 이재명 도지사 SNS서 “꼼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휘말렸다.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만든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 참여 의사에 대해 논의하면서다.

민주당은 10일 진보 진영 재야 시민단체가 제안한 연합정당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가졌다. 당초 이번 주 중 전당원 투표로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당내 반발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소속 의원들의 의사부터 들어보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 진영 정당의 입장이다. 정의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 민생당은 당내 갈

등으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사실상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만드는 셈이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주민·설훈·이수진 최고위원 등이 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비례성 강화’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지지율과 의석 배분율을 최대한 일치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30석 이상 정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은 확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자에 정당 득표율로 얻은 비례대표를 더하는 병립형 방식으로 얻는 17석 내에서 미래통합당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통합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 차원에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 다수 확보’라는 선거 전략도 냈다. 병립형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20대 총선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 데 대한 대응 전략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세운 선거 전략과 달리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의사에 대해 논의하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일부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당내 인사들이 비례 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심판하는 경기에서 꼼수를 비난하다가 그 꼼수에 대응하는 같은 꼼수를 쓴다면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의사에 대해 논의하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벤처업계 주도 규제개혁당, 청년정치세력과 연대

차선책으로 연대 통한 국회 입성 부분적 완화 넘어 혁신 개혁 도모

IT 관련 벤처기업인들이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당이 직접 창당을 하는 것 외에도 청년정치세력과 연대 모색에 나섰다.

후보등록 마감일인 이달 27일까지 당원을 모아 창당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규제개혁의 가치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정당과 연대를 통해 원내 진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인들이 직접 창당을 도모하는 ‘최선책’ 외에 연대를 통한 국회 입성이라는 ‘차선책’까지 마련한 것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당 창당준비위원회(준비위) 측은 전날 국

회 정론관에서 시대전환, 남북통일당, 모두의당과 함께 ‘4·15 총선 시대전환 연대’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당은 친기업적이면서 친서민적인,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제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부분적 완화가 아닌 혁신적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연대에 나섰다

앞서 규제개혁당 준비위는 당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직접 창당에 실패하더라도 청년정치세력과 연대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원내에 진입, 네거티브 규제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중앙당 창당을 위해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조직해야 하고 해당 시·도당은 각각 1000명 이상씩 총 5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춰야 한다. 이번 총선의 경우 창당을 위한 준비기간은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일인 이달 27일까지다.

앞서 규제개혁당 준비위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속에서도 발기인대회를 통해 창당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아울러 ▲포지티브(Positive) 규제(제한 허용, 원칙 금지)를 네거티브(Negative) 규제(원칙 허용, 제한 금지)로 전환 ▲혁신가들이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젊은 세대의 도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 기회 제공 등을 창당선언문에 담기도 했다.

아울러 창당을 위해 당원 모집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까지 당원을 최대한 모집, 창당을 위한 조건을 채우되 창당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연대하는 쪽으로 추가 방향을 잡는 것이다. 연대할 청년정치세력은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정부-대기업 힘 합쳐 ‘ICT 스타트업’ 육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의 도약을 위해 올해 정부, 대기업, 정책 금융기관이 조력자 역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유망 ICT 스타트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와 멘토기업인 대기업이 ICT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하고 향후 3년간 협력 지원해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성공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정부 주도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멘토기업 보

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38일간 사업공고를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6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대기업이 운영 중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창업 5년 이내 ICT 중소벤처기업이 제안하는 과제물 자유공모를 통해 총 16개를 선발한다.

/채윤정 SI 전문기자 echo@